월/요/광/장

김 배 성

한식 세계화 성공의 조건

최근 김치,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냉면, 해물파전, 막걸리 등의 우리 음식들이 일본,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예로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들인데 왜 요즘 들어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는 1990년대 중반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시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음식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아졌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대장금,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 드라마 및 노래 등 우리의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인기도 한 몫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란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상품화하여 식품산업 비즈니스 효과를 확대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한식을 '세계 5대 음식화' 한다는 목표하에 2017년까지 한식당수 4만개(현재 7~8천 개 수준)와 세계 일류 한식브랜드 100개를 만든다는 세부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 요리 명장 양성, 스타 한식당 운영, 한식 체험기회 확대, 한식 R&D 확대, 국산 식재료 공급시스템 구축, 한식문화 알리기, 한식 이미지 업프로젝트, 한식 브랜드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르꼬르동 블루같은 세계적인 요리학교에 한식 강좌를 개설해 세계적인 요리사들을 양성·보급하고, 국내 특급호텔에 한식당 개설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한식 세계화 수준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까? 해외에 분포한 이탈리안 식당이 6만 개, 일식당이 4만 개, 태국식당이 1만 3천 개 수준이라는 점과 외국인들의 한식을 시식해본 경험이 16%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한번 길들여진 사람들의 식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의 목표는 우려스럽고 요원해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해외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식당 성공사례와 다른 나라 음식에는 없는 한식만이 갖는 차별적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 진출해 성공한 '북창동순두부' 이희숙 대표는 '고객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메뉴'를 성공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4개의 매장에서 월 4억 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장금' 온대성 대표는 '음식의 맛과 더불어 철저한 현지화'를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우리의 파전, 잡채, 돌솥비빔밥, 깍두기, 오이김치, 나물류 등 가정식으로 일본에서 연매출 20억엔을 기록하고 있는 '처가방'의 오영석 대표는 기존에 알려진 메뉴에서 벗어나 가정식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말하고 있다.

토종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로 알려진 '제너시스BBQ'는 2003년 처음 중국에 진출해 55개국 35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너시스는 성공요인으로 현지인 사업 파트너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철저한 현지화를 내세우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한식으로 세계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의 여러 성공요인 중 공통점은 '차별성과 현지화'인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의 그들의 식단과 식문화에서 접해보지 못했으나 매력적인 우리 음식과 식문화 그리고 우리만의 전통방식이 아닌 현지문화와 결합해 현지인이 찾기에 어색하지 않은 새롭게 '현지화된 한식'이 성공요인으로 보인다. 그것이 또한 한식 고유의 독특한 맛과 더불어 한식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적 장점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정부의 한식 세계화 추진내용을 해외 진출 업체의 성공요인과 비교해볼 때, 아쉬운 점은 다양한 정책메뉴는 나열되어 있으나, 차별화된 정책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식 브랜드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정책적 의지로 달성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브랜드가 현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추진정책은 차별화된 현지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이러한 조건이 사업평가의 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귤이 강북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의미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좋은 상품도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은 곳에 가면 퇴색된다는 의미이다.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더라도 여전히 맛있는 귤이 되게 하려면 그곳의 기후와 풍토에 맞도록 종자를 개량하면 될 것이다. 한식 세계화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좋아해서 그들의 발로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개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가 제대로 추진되어서 우리의 한식이 해외 각지의 세계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한식 태평성대의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 소 연

국민참여재판 양형(量刑)에 관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거나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에 관하여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참여재판은 살인, 강간치상 등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의 배제 결정이 없는 경우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에서는 참여재판 시행 첫 해인 2008년에 3건이 진행된데 이어 2009년에는 총 7건이 실시됐으며, 앞으로 3건이 더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참여재판을 하였던 사건으로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냉장고를 사체 위에 넘어뜨려 우연한 사고로 가장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명의 배심원이 징역 5년을, 5명의 배심원은 징역 8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항소심은 징역 1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 2007년 4월 27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에는 살인, 뇌물, 성범죄 등 7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며,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한 관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양형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기준에 의하면 살인죄는 특별히 참작할 사유나 비난할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 징역 8년~11년으로 정하면서 특별한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6년~9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10년~1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의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필자는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제시하는 양형에 관한 의견이 비슷한 사건의 통상 재판 절차에서 선고되는 형이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비하여 낮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참여재판 사건 대부분이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폭행치사 등의 범죄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주관적 요소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되고,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양형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배심원의 경우 다른 직업 활동을 하다가 배심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조인들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범하고도 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통상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사이에 양형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재판이 시행 된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배심원으로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검사 모두가 힘을 모아 양형의 형평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목적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지검 검사〉

기 고

나 무 석

영산강이 살아야 호남이 산다

정부나 시·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렇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세종시 문제가 그렇다. 4대강 살리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발전을 기약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렇지 못하다. 일단 반대해놓고 보자는 것 같아 아쉽기 짝이 없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광나주향우회(在光羅州鄕友會)에서는 지난 연초에 대통령과 광주시장 그리고 전남지사에게 영산강 살리기에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나주·화순 출신 최인기 의원도 정부를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은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는 한 술 더 떠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민주당을 떠나라 고까지 했다. 안 의원은 지역 예산을 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지 묻고 싶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지역 행사에 참석했는데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나 몰라라 하라는 말인가?

얼마 전 이명박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고장 나주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은 참석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국사(國事)를 논하고 지역 발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당의 결정인지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요한 지역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고는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흠집이나 내고 있다니 아예 발목을 잡자는 이야기인가? 아무리 당론이라고 해도 자기 소신과 다르게 소리를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중앙 일간지에서조차 "영산강이 살아야 호남이 산다"며 사설을 통해 죽어가는 영산강의 회생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다시 살아날 절대 절명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본다.

영산강은 140만 광주시민의 생활하수가 흘러나가는 곳이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모두가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그것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도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광주 시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의(民意)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흔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당리당략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잘 감시해야 할 것 같다. 〈재광나주향우회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위급한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익히자

환절기와 추운 겨울철에 가장 위험한 상황은 노인들의 급성 심장마비이다. 다시 말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3분 이상 정지되면 뇌가 손상을 입고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응급처치가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환자의 의식을 확인 후 주변사람과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환자의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코를 자신의 귀에 붙여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환자의 코를 막고 2회 인공호흡을 한 후 30회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환자에게는 시간이 생명이다. 이번 기회에 내 가족, 동료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귀중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꼭 익히도록 하자.

▲문동기·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사 설

여야, 'U대회 지원법' 처리 서둘러라

국회 파행으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지원법' 처리가 지연돼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U대회 지원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위가 구성될 경우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경기대회 지원법'에 광주 U대회를 포함한 개정법을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원법은 오는 8~9일 본회의 상정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마저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안 처리와 특위 개최, 법률안 심사,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여야는 10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지원법이 무난히 처리될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U대회 지원법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대회 준비일정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규정에는 U대회 유치 후 6개월 이내 조직위 구성을 권고하고 있어 지난 5월23일 대회를 유치한 광주시는 11월23일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시는 내년 1월께 조직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FISU측에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로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야는 U대회 지원법을 4대강 살리기 예산 등 대치 현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정쟁 때문에 어렵게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지역 정치권도 지원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예산안 심사 이전에 지원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정책 '가계 살리기'에 집중해야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국내 경제에 빨간 등이 켜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빚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비 지출마저 줄여야 할 정도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통계에서 올 3분기 중 실질 교육비 지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교육비 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환란 당시인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이다.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은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수 경기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투자 위축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가계부실이 금융기관에까지 불똥이 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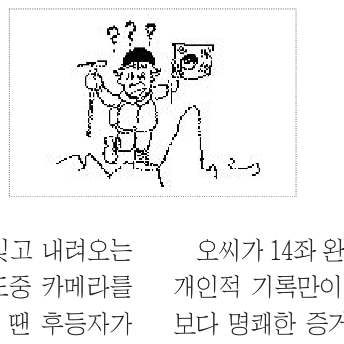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국제기구나 민간 연구기관들의 예상보다 높은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 부실'이라는 복병을 털어내지 않는 한 수치상 성장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 소득증가나 민간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장은 실속없는 '외화내빈'에 불과하다.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는 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탄탄한 경제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가계 살리기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 대출을 줄이고 장기대출 비중을 늘려 빚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대출체계 개선도 시급하다.

경제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無 等 鼓

등정(登頂) 시비



'희박한 공기'를 뚫고 천신만고 끝에 거봉(巨峯)에 올라선 산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단순한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정상에 오른 것을 기록으로 인정받으려면 등정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동료나 셰르파의 도움을 얻어 주변 산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는 것이다. 알파인 스타일로 단독 등반했을 때는 '셀프카메라'를 활용한다. 정상 사방의 파노라마를 영상으로 담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도 많다. 등정 순간 악천후가 계속 되거나, 사력을 다한 나머지 체력이 바닥나 사진 찍는 것조차 잊고 내려오는 경우가 그러하다. 등반 도중 카메라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럴 땐 후등자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이나 피켈, 소지품 등을 남겨놓고 오는 게 관례다.

등정 시비는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제기된다. 인류 최초로 낭가파르밧(8,125m)을 단독 등정한 '불세출의 영웅' 헤르만 불이나 한국인으로선 처음 8,000m급 14좌를 완등한 엄홍길씨도 논란에 휘말렸다. 헤르만 불은 정상에 두고온 피켈이 46년 만에 발견돼 의혹을 벗었고, 엄씨는 해당 봉을 다시 올라 논란을 잠재웠다.

이번엔 '여성 최초 14좌 완등'을 노리는 오은선씨의 칸첸중가(8,586m) 등정이 논쟁에 휩싸였다. 등정 사진 속 풍경에 정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부족하고, 등정 시간도 너무 짧으며, 8,400m에서 발견된 깃발 등이 근거가 되고 있다. 오씨는 3일 회견에서 "당당히 정상에 섰다고 말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오씨가 14좌 완등에 성공한다면 이는 개인적 기록만이 아닌 국가적 영예다. 보다 명쾌한 증거 제시나 보완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한국산악계의 신뢰도나 역량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산악계도 진위를 가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